

제주4·3 연구 30년

- 진실과 정의 추구를 위한 과정 -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I. 서론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받지 않으며,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이 논의되고 채택되던 시기, 제주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당하고, 고문과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았으며, 법의 이름으로 유린됐다.

올해는 제주4·3이 발생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걸개그림이 내걸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제주4·3, 이제 우리의 역사'라는 4·3 기획전이 열렸다. 반공체제 아래 억압받고, 탄압을 받았던 4·3을 이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됐다. 제주4·3은 금기된 역사였다. 군사독재정권과 보수정권 체제에서 '4·3 드러내기'나 4·3운동은 금기시되거나 탄압을 받았다. 4·3은 '폭동'이었고, '반란'이었으며, 당시 죽어간 제주도민들은 '폭도' 또는 '빨갱이'였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주4·3의 비극성은 제주사람들이 국가조직이나 준군사단체에 의해 개인적, 집단적으로 억울하게 죽었지만 수십년 동안 공개적으로 억울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부에 의해 '빨갱이' '폭도'라는 낙인이 찍힌 채 기억을 억압당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국가권력의 억압에도 제주사람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사람들의 내면에 집단 기억화 됐다. 제주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기억을 보존하고 '대항기억'(counter-memory)으로 재생산함으로써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공식적 역사의 지배적 담론에 대항했다.¹⁾

반세기 가까이 망각과 침묵을 강요당해 온 4·3은 기록의 부재로 진상을 밝히는 작업을 어렵게 했다. 기존 연구자료가 없었고, 그나마 있는 관변자료들은 4·3을 편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과 1988년 광주 5·18청문회가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으로 40여년 동안 억압됐던 4·3 기억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국가권력의 억압적 기제를 뚫고 증언과 기록을 근거로 4·3의 진실 드러내기와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6월 항쟁 이후 제주4·3 연구가 진전을 이뤄져왔지만, 이의 속도는 더디다. 4·3 연구가 여전히 제주사회

1)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서울: 푸른역사, 2000), p.66.

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 인력의 한계, 자료 발굴의 한계로 이어진다.

제주4·3 논의가 6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은 4·3 진실과 정의 추구를 위한 여정이었다. 제주4·3 연구는 사건 발생 이후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처음으로 4·3 위령제를 지낸 1988년의 4·3 40주년 이후 10주년 단위로 전화기를 맞아왔다. 이 글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연구자들이 그동안 어떠한 방식의 연구를 진행해왔는지 4·3 70주년을 맞아 현 단계에서 4·3연구에 대한 정리를 시도했다. 그동안 몇 편의 연구사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덧붙이는 것으로 정리했다.²⁾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제주4·3 연구의 시기별 4·3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2장), 지금까지 수행해 온 4·3 연구를 분석하며(3장),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4장)를 살펴보고자 한다.³⁾

II. 시기별 4·3 논의 특징

1. 4·3 연구 이전(1954~1987년): 탄압과 금기의 시기

이 시기는 제주4·3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1954년 9월 이후 1987년 민주화운동이 전개되기 전까지이다. 반공 군사독재정권 체제였던 이 시기는 4·3 연구가 본격화하기 이전의 시기로서, 4·3 관련 학술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4·3 희생자들의 희생과 학살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과 분노, 좌절과 체념을 드러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국가권력의 폭력적 억압으로 ‘망각’을 강요당해온 4·3의 진실 밝히기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 이승만 정권 이래 1960년 4·19혁명 직후의 짧았던 진상규명 요구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4·3 논의는 국가권력이 독점하였다.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가 2003년 10월 확정될 때까지 4·3의 공식적 기록은 기존 군·경 등 관변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동’이었고, ‘반란’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4·3을 언급한 최초의 관변 자료는 정일권·예관수가 1948년 8월 국방경비대의 교육자료로 펴낸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이다. 4·3의 본격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초토화 시기 이전에 나온 이 책은 제주4·3사건을 정치적 측면이 강한 유격전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어 1952년 3월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간행회가 발행한 『대한경찰전사 제1집 - 민족의 선봉』에는 “제주경찰감찰청 및 제주경찰서를 포위 침습한 기세를 취하게 되자 경찰은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발악 항거하는 그들에 대하여 시위

2)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9); 박찬식,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4·3과 역사』(제주: 각, 2008); 허호준,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연구현황과 과제탐색」, 『평화연구』 제22권 제2호(제주대 평화연구소, 2012. 2).

3) 이번 글에서는 외국의 4·3연구 동향은 제외했다.

4) 4·19혁명 이후 제주대학교 학생 7명은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해 도보로 일주도로변 50개 마을을 돌며 자체 조사에 나섰고, 모슬포 지역 주민들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신보사는 1960년 6월 2일 사고를 내고 ‘4·3사건 및 6·25 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6월 10일까지 1259건의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인명피해는 1457명에 이르렀다. 이 신고서를 접수한 『제주신보』 전부 신두방은 6월 23일 제주시 외도동에서의 일가족 학살사건을 검찰청에 고발했다. 가파도 출신 통일사회당 김성숙 의원은 1961년 1월 26일 “4·3사건 및 6·25사변 중 4~5만명의 제주도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경향신문』 1961. 1.26; 『동아일보』 1961. 1.26.

발포를 한 결과 수명의 사상자를 넘으로써 일단 진압되었으나 혼미한 그들은 경찰이 양민을 함부로 총살하였다는 허울 좋은 허전(虛傳)을 유포”했다고 왜곡했다. 이는 왜곡의 전형이 됐다. 육군본부가 1954년 펴낸 『공비토벌사』도 『대한경찰전사 제1집』의 4·3부분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관련 측의 4·3 논의에서는 어느 책에서건 군·경의 가혹행위, 대량학살에 대한 부분을 기술한 책은 없다.

반면 4·3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정리한 4·3 자료집은 기존 군·경의 관점과는 대척점에서 있다. 김봉현·김민주가 쓴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 자료집』은 4·3 무장대 참여자, 피해자 등을 광범위하게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민이 ‘무장투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과 전개과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4·3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이 자료집은 상당 부분에서 오류와 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1980년대까지도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4·3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념비적인 2개의 4·3 관련 책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현기영이 쓴 4·3의 비극을 그린 소설 『순이삼촌』이며, 또 하나는 일본에서 김봉현의 4·3 자료집이 나왔다. 김봉현은 4·3 30주년을 맞은 1978년 『濟州島 血の歴史-〈4·3〉武裝闘争の記録』(東京: 國書刊行會, 1978)을 출판했다. 이 책은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김봉현의 4·3에 대한 인식과 자료집 집필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서문에서 “이 비참한 대사건은 당시 모든 보도가 금지돼 외부 특파원이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끝났다. - 제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저지른 ‘아우슈비츠’에서의 학살, 일본군의 ‘남경대학살’, 전후에 일어난 대만의 ‘2·28’학살, 그리고 세계를 흔들었던 남베트남의 ‘밀라이마을’ 학살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완전한 잔학성을 보여주는 살육이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의 4·3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봉기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가 이민족의 지배나 권력의 학정에 대항하는 투쟁의 발걸음에 있는 이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는 차치하고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애국 인민이 압제자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⁵⁾ 남로당 활동을 한 김봉현은 당시로서는 폭넓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지만, 4·3 논의에 있어 일본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자료집의 오류 등으로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4·3 위령제가 1985년부터 열렸다. 이 해 탐라연구회가 창립돼 ‘4·3을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며, 무장대 활동을 했던 김동일, 김민주를 비롯해 양성종 등이 참가한 가운데 4·3희생자 신위를 적어놓고, 조촐하게 마련한 제물을 올려 위령제를 지냈다.⁶⁾ 이 시기 4·3을 언급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연도	제목	저자	출판사
1948.8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	정일권·예관수	병학출판사
1949	적화전술: 조국을 쪼먹는 그들의 전술	김일수	경찰교양협조회
1952.3	대한경찰전사 제1집-민족의 선봉	내무부 치안국 대 한경찰전사간행회	홍문출판사
1954	공비토벌사	육군본부	육군본부
1963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김봉현·김민주	대판: 문우사
1967	한국전쟁사 제1권-해방과 건군	국방부 전사편찬 위원회	국방부 전사편찬 위원회
1973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김점곤	박영사
1978	濟州島 血の歴史-〈4·3〉武裝闘争の記録	김봉현	동경:국서간행회

5) 김봉현, 『濟州島 血の歴史-〈4·3〉武裝闘争の記録』(東京: 國書刊行會, 1978), p.1.

6) 양성종 채록, 2017.12.16. 제주시 조천읍 출신 양성종 선생은 증언채록은 한 10여일 뒤 지병으로 숨졌다.

2. 1기(1988-1997년): 대항기억의 시기

1988년은 4·3 40주년이 되는 해다. 제주4·3 발생 이후 최초의 공개적인 4·3 위령제가 열렸다.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이 시기 들어 민간연구단체와 개인별 연구, 언론의 4·3 진실 들내기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 시기는 40여년 동안 억눌려왔던 4·3 기억이 대항기억의 형태로 나온 시기다. 기존의 ‘폭동론’, ‘반란론’에서 ‘항쟁론’으로의 대항기억이 쏟아져 나왔다.

4·3 진상규명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나, 당국의 탄압도 계속됐다. 1988년 3월 아라리연구원이 편낸 『제주민중항쟁』 I, II, III권은 이러한 대항기억의 초기 결과물이었다. 이 책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존 메릴의 논문 *Chejudo Rebellion*과 김봉헌·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를 비롯해 각종 신문, 미군 정보보고서 등이 실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 책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난 1990년 7월 이 책을 펴낸 김명식씨를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4·3 진상규명운동을 탄압했다.

같은 해에 출판된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서울: 소나무)는 4·3 증언 채록작업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 증언집을 빼고는 우익적 시각에서 서술했다. 1988년에 나온 조남수의 『4·3진상』은 체험과 증언을 바탕으로 쓰인 책으로 4·3 재조명작업이 이뤄지는 시기에 우익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민주화운동 시기 이후에도 군·경의 4·3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88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대비정규전사』는 “국방경비대의 공비소탕작전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제주도 지구에서 전개된 것이 처음이었다”며 4·3을 ‘폭동’이며 ‘게릴라전’의 시초로 보고 있다.⁷⁾

그러나 민주화운동 이후 4·3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제주신문』은 1988년 3월 5일 4·3취재반을 결성하고, 이듬해 4월 3일부터 연재하기 시작해 매주 2회 연재하다 ‘제주신문 사태’로 1990년 12월 5일자의 제57회로 중단됐다. 이어 『제민일보』가 이어받아 1990년 6월부터 1999년 8월 28일까지 10년 동안 456회가 연재됐다. 언론의 4·3 기획은 4·3 진상규명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⁸⁾

1989년 5월 10일 제주4·3연구소가 개소했으며, 연구소는 그 이후 4·3 연구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1989년 5월 10일 발족한 제주4·3연구소는 창립 이후 증언집 『이제사 말함수다』 I, II(서울: 한울, 1989, 1990)를 펴낸 데 이어 『4·3 장정』 통권6권, 무크지 『제주항쟁』(1991)을 발간해 증언과 자료 발굴을 통한 학술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였다. 1991년에는 『제주신보』(1947.1.1~1948.4.20)를 발굴, 출판함으로써 당시의 해방 공간 제주지역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은 물론 4·3 무장봉기의 도화선이 된 3·1절 기념대회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제주도경찰국이 4·3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 펴낸 『제주경찰사』는 4·3을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좌익분자들의 만행에 의한 폭동사건”으로 규정하고, 북촌리 학살사건 등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등 심각한 사실 오류를 범했다. 이어 제주경찰청은 2000년 『제주경찰사』(개정판)를 펴냈으나, 이 책도 “1948년 4월 3일 평화의 땅에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좌익분자들의 만행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가리켜 제주도의 4·3폭동사건”이라고 규정했다가 4·3단체와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⁹⁾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동위원회, 1988), p.47.

8)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서울: 선인, 2015).

9) 『제민일보』 2005. 5.4.

3. 2기(1998~2007년): 진실추구의 시기

4·3 발발 50주년을 맞아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펴낸 『제주4·3연구』는 정치학, 역사학, 법학, 의학, 문학, 인류학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학문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4·3 연구의 나침반 구실을 했다. 연구자들은 김인덕, 「1920년대 후반 재일제주인의 민족해방운동」;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서중석, 「제주4·3의 역사적 의미」; 김순태, 「제주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정해구, 「제주4·3항쟁과 미군정 정책」; 임대식, 「제주4·3항쟁과 우익청년단」;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황상익, 「의학사 측면에서 본 4·3」; 김종민, 「4·3 이후 50년」;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연구: 제주4·3과 한국현대사」 등 4·3의 전사인 일제 강점기부터 4·3의 배경, 4·3 당시 계엄령의 불법성, 4·3의 의미 등을 짚었다. 또 1998년에 치러진 학술문화사업 가운데 잃어버린 마을 조사사업, 국내외 학술대회 등은 그때까지의 4·3 논의를 종합함으로써 4·3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제주4·3연구소는 1998년 4·3 5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동티모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국내외 민주연구단체와 연구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과 그 성취였다. 제주4·3특별법 제정 요구는 1990년대 초반 해도 '이상'에 가까운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운동은 10년도 되지 않아 이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1997년 시작된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맞아떨어졌다. 1997년 서울의 4·3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하고, 1999년 3월 한시적 위령사업을 추진해온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와 '제50주년 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통합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결성돼 특별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제주4·3유족회가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에 앞장 서면서 전국순례 홍보, 상경투쟁 등을 통해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00년 1월 11일 공포됐다.

또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함으로써 4·3 연구는 사실상 획을 그었다. 이 보고서는 4·3 전개과정, 피해실태 등 4·3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역사상 과거사 관련 첫 공식 조사보고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자 2003년 10월 31일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2006년 4월 3일 제주평화공원에서 열린 위령제에도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됐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위령제 행사 참석은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일부 연구자들이 주도한 4·3 연구의 폭도 깊어졌다. 박찬식은 4·3의 도화선이 된 3·1 사건과 형무소 재소자 문제, 북한의 4·3 인식으로까지 4·3연구의 폭을 확대했다. 그는 당시 제주 민중의 지향점은 주변부에 처해 있는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제주도에 끼친 세계냉전체제, 한반도 중앙권력의 물리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두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4·3과 5·10선거의 관계, 미군정의 책임을 규명하는 연구도 이뤄졌다.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4·3 당시 계엄령에 대한 법학자들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법 제정 이후에는 군법회의 재판의 불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수형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한 4·3 희생자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4·3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폭동'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엄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제주4·3사건을 '폭동'이라고 주장했다.¹⁰⁾ 국방

10)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4.3사건은 사건을 주동하고 개입한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제주4·3특별법에 제정되고 제주4·3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인 2002년에 도 특별작전에 참가했던 군·경 출신들의 증언과 정부 문서, 작전 사료를 기초로 『4·3사건 특별작전사』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이 책은 제주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군·경은 대량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고, 군·경의 방화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4. 3기(2008~2017년): 재억압과 낙관적 투쟁의 시기

제주4·3 60주년을 맞은 2008년부터 10년 가까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의 출현으로 4·3 흔들기가 계속된 재억압의 시기이자, 이에 맞선 투쟁의 시기로서 4·3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돼 나간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때의 투쟁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거스를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낙관적 투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주4·3 60주년 행사는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이뤄졌다. 4·3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돼 다양한 행사가 짜임새 있게 치러졌다. 이해 11월10일에는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했다. 2008년 3월에는 제주4·3평화기념관이 개관했다.

60주년을 맞은 위령제와 진상규명이 활발해진 것에 비례해 보수세력들의 저항도 거셌다. 4·3 60주년에 즈음해 제주4·3유족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정치권이 대통령의 4·3위령제 참가를 간절히 호소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3월 7일 기자회견, 제주도의 3월 18일 청와대 건의, 여야 정치권, 4·3관련 단체들이 대통령의 60주기 위령제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였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재향군인회,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94개 보수단체로 결성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진상조사보고서』 수정과 4·3평화기념관 개관 연기 진정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개선 요구’ 문건에서 제주4·3에 대해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라며 “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4·3 유족들과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4·3의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보수세력들의 저지에도 개의치 않고 진전됐다. 2009년 들어 보수단체들의 법적 투쟁이 이어져 2건의 헌법소원, 2건의 국가소송, 2건의 행정소송 등 모두 6건의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했으나, 2009~2012년 모두 각하, 기각됐다.

2013년 8월2일에는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 재향경우회가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 없는 화해를 선언했다. 같은 해 12월27일에는 ‘화해와 상생의 통한 도민 대통합 추모행사’가 열렸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가기념일 지정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기념일 제정문제가 제기됐다. 2012년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모든 유력 후보들이 4·3 국가기념일 지정을 공약했다. 2013년 6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념일 지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절차를 밟아 2014년 3월24일 4·3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선포됐다.

“2003년 당시 국방부는 4.3사건이 무장폭동이라는 입장이었고, 수정을 요청한 (4.3관련 단체)쪽은 무장봉기로 표기해달라고 했다”며 “(합의가 어려워) 양쪽의 입장은 그대로 둔 채 소요사태로 (절충해) 표기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2003. 11. 1; 2006. 4. 4; 2008. 10. 7; 10. 9.

Ⅲ. 제주4·3 연구 분석

1. 4·3 연구의 특징

이 장에서는 제주4·3 관련 연구물을 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와 제주4·3연구소의 『4·3과 역사』 등 3가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국내의 학위 논문의 경우, 1988년 이후 4·3 관련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의 4·3 관련 논문도 주로 이 시기 이후에 나왔다. 2002년부터 대중적 학술지를 표방한 제주4·3연구소의 『4·3과 역사』 논문도 분석했다.¹¹⁾

첫째, 학위논문은 모두 62편이다. 제주4·3 40주년부터 시작되는 1기(1988-1997년)에는 8편의 학위논문이 나왔고, 50주년부터 시작되는 2기(1998-2007년)에는 24편이, 60주년부터 시작되는 3기(2008-2017년)에는 30편의 학위논문이 나왔다. 시기에 따라 논문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들 논문 가운데 4·3 소설과 작가 연구를 다룬 논문은 1기 1편, 2기 4편에서 3기에는 11편에 이를 정도로 3기 들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문학작품과 문학가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위 논문 가운데 제주대 배출된 논문 수는 전체 학위논문의 3분의 1 가량인 21편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2편이다.

둘째,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 학술지의 4·3 관련 논문은 89편이다. 4·3의 진상과 관련한 연구는 60주년 전까지 집중된 반면 그 이후에는 드물었다. 4·3의 진상과 관련한 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19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들이 4·3 문학과 기억, 트라우마, 법적 문제 등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1998년 50주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4·3 연구물들이 나왔으며, 특히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해와 그 이듬해에 그나마 집중적(14편)으로 나왔다. 학술지 논문 가운데 4·3 문학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연구물은 2011년 이후 꾸준히 나왔고, 2015년에는 한꺼번에 8편이 생산됐다. 2011년 이후에는 4·3 기억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뤄 한해 1~2편의 논문이 나왔다.

셋째, 제주4·3연구소의 『4·3과 역사』(2001-2017년)에 실린 논문은 79편이다. 이 가운데 21편이 진상과 관련된 것이며, 2011년 이후 4·3 진상과 관련한 논문이 1~4편씩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4·3연구소의 학술지에도 4·3 기억과 트라우마 관련 논문이 17편에 이르러 4·3 진상과 관련한 논문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4·3 진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을 계기로 기억과 트라우마, 법적 문제 등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연구주제 분석

제주4·3 연구의 주제도 지난 30여년 동안 변했다. 제주4·3 연구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시작했다. 그 이전 40여년 동안의 긴 침묵 속에 있었던 4·3은 5·18 광주청문회를 통해 본 광주의 참상을 보면서 4·3 경험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고, 민주화운동 세대들도 4·3 연구에 눈을 돌려 30여년 동안 진상연구에서부터 시작해 기억과 트라우마, 4·3 문학 및 문화운동, 4·3의 피해구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적 한계와 연구 인력의 한계 등으로 4·3 연구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 이

11) 이 학술지는 제주4·3연구소가 그 해에 주최한 국내외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외부 연구자들이 낸 논문을 모아 대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발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학술지에 나온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자의 판단에 따라 경험담이나 르포 형식, 간단한 발표 형식 등 학술 연구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글들은 제외했다.

제까지 나온 논문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 논문의 시기별 주제 영역은 1기에는 8편 가운데 4·3의 진상과 관련한 논문이 6편에 이를 정도로 이 시기 전까지 금기시됐던 4·3연구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이 시작돼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던 시기여서 진상규명과 관련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어 2기에는 13편이 4·3 진상과 관련한 논문이 나와 전체 24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3 기억 담론과 작가, 문학작품 등을 분석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 시기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진상조사가 이뤄져 2003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해 발간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던 시기로, 1기에 견줘 3배나 많은 논문이 배출됐다. 이어 3기에는 4·3 진상과 관련한 논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문학 작품 등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해 전체 30편 가운데 43%에 이르렀고, 4·3 기억 및 트라우마, 4·3의 의미, 4·3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됐다. 이 시기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출범으로 국내 보수세력의 4·3 흔들기가 극심한 시절이었다.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이후 4·3 진상에 대한 학위 논문의 발표는 크게 줄었는데, 이 시기에는 2기에 견줘 진상조사와 관련한 논문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반면 4·3 문학작품과 작가에 대한 학위 논문은 급증했다. 이들 논문은 대부분 『화산도』의 작가 재일동포 김석범과 『순이삼촌』의 작가 현기영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제주4·3 관련 학위 논문

시기	연도	제목	이름	대학	전공	비고
1기 1988 ~ 1997	1988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양한권	서울대	정치	석사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박명림	고려대	정치	석사
	1992	4·3 제주 민중항쟁연구	김광제	고려대	역사 교육	석사
	1993	현기영 소설 연구	이계영	중앙대	문예 창작	석사
	1994	언론의 제주4·3 보도에 관한 연구	김광우	서강대	언론 공보	석사
	1995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정심	성균관대	사학	석사
	1996	제주도 4·3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김대근	동의대	사학	석사
제주도 4·3항쟁 연구: 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박진순	성신여대	역사 교육	석사	
2기 1998 ~ 2007	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정주	이화여대	여성	석사
		제주4·3항쟁연구: 통일정부수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미영	연세대	역사 교육	석사
	2000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을 사례로	김지수	제주대	지리 교육	석사
	2001	현기영 소설 연구: 사회의식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이기세	경희대	국어 교육	석사
김석범의 작가의식: 화산도를 중심으로		나카노 마카도	고려대	비교 문학	석사	

				협동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윤석찬	제주대	역사 교육 석사
		제주4·3기념공원 기본계획	이상은	시립대	조경 석사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문순보	성균관대	정치 석사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4·3 학습방안	강순문	제주대	역사 교육 석사
	2002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 연구: '제주4·3'을 중심으로	양봉철	성균관대	역사 교육 석사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강성현	서울대	사회 석사
	2003	현기영 소설 연구: '4·3' 소재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이창훈	경희대	국어 교육 석사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5·10선거를 중심으로	허호준	제주대	정치 석사
	2004	1949년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 연구	김양희	목포대	사학 석사
		제주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이정숙	성균관대	역사 교육 석사
		'제주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함옥금	제주대	사회 교육 석사
	2005	현기영 소설 연구: 역사와 현실에 대한 소설적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김수미	제주대	국문 석사
	2006	제주4·3 담론의 형성이 정치적 작용	고성만	제주대	사회 석사
		도제 실시를 통해 본 '제주4·3'의 정치 사회적 배경: 1945년 8월 15일~1947년 2월 28일	현석이	고려대	사학 석사
		제주 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분석	장윤식	제주대	사학 석사
		제주 4·3 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김은희	제주대	사학 석사
		제주 4·3 투쟁 연구	양정심	성균관대	사학 박사
	2007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	현진호	제주대	역사 교육 석사
		제주4·3 시기 아동학살 연구: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허영선	제주대	한국학 협동 석사
3기 2008 ~ 2017	2008	재일한국인의 문학과 현실: 김석범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정희	강원대	일본 석사
		제주4·3사건의 문학적 재현에 관한 연구: 현장 체험의 유무를 통하여	박연정	국민대	국어 교육 석사
		현기영 소설 연구	김신영	상명대	국문 박사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현혜경	전남대	사회 박사
		폭력 메커니즘과 기독교 담론윤리 구상: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김상기	연세대	신학 박사
	2009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김평선	제주대	정치 석사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김용철	제주대	사학	석사
	4·3소설의 서술 시점 연구: 현기영과 현길언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미선	경희대	국문	박사
2010	김석범의 초기 작품 연구: 폭력과 개인의 기억을 중심으로	조수일	건국대	일본 문화 언어	석사
	현길언의 4·3소설 연구	양철수	제주대	국문	석사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박영기	경희대	역사 교육	석사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윤섭	제주대	행정	박사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허호준	제주대	정치	박사
	김석범의 「까마마귀의 죽음」론: 역사와 기억, 그리고 문학	이경아	제주대	일어 교육	석사
2011	제주4·3 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생애사와 미술표현을 중심으로	김유경	영남대	미술 치료	박사
2012	이승만 정권 초기의 반공국가 만들기(1948년 정부수립~1950년 한국전쟁 이전)	김성민	전남대	역사 교육	석사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양상: 종결법을 중심으로	정수빈	한국교원 대	국어 교육	석사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의 공산세력의 역할: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방철주	충남대	평화 안보	석사
	동아시아의 평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환	서울대	사회	박사
2013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조정희	제주대	사회	석사
	제주4·3 문화예술축전의 현재적 의미	허수정	한국외대	글로벌 문 화 콘 텐츠	석사
2014	현기영 4·3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양원혁	제주대	국문	석사
	장일홍의 제주 4·3사건 소재 희곡 연구	김봉건	고려대	문예 창작	석사
	제주4·3사건 트라우마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영상적 재현	김종철	중앙대	문화 연구	석사
	1946~1953년 계엄의 전개와 성격	김춘수	성균관대	사학	박사
2015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조국'관 형성: 제주4·3사건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강전우 수	연세대	한국 학협 동	석사
2016	제주4·3사건과 주민의 동굴 피신생활	이그나 즈 아니타	제주대	사학	석사
2017	제주도 하귀마을의 4·3 경험과 치유과정 연구	하명실	제주대	사학	석사
	김석범의 '4·3소설' 연구: 작중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임성택	전북대	일문	박사

둘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에서 4·3 관련 논문은 1기 후반에 비로소 보인다.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2기가 시작되는 1998년 4·3 50주년 때는 4·3의 진상과 관련한 논문 4편이 나왔다. 이 시기의 글들은 대부분 4·3 진상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4·3 당시 계엄령의 불법성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글도 나왔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때를 맞아 4·3 당시 군사재판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특별법, 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한 연구물들이 나왔고, 4·3과 미국, 4·3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을 고찰한 글들이 나오고 2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4·3 기억에 대한 글들이 나오고 남로당, 문학, 미군정, 5.10선거, 아동 문제 등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4·3 60주년인 2008년부터 접어든 3기 초반에는 기억과 다크투어리즘, 4·3 트라우마, 국가폭력 등에 대한 연구가, 3기 후반에는 4·3 문학과 기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4·3의 진상에 대한 연구도 가끔 나왔다.

2기(1998~2007년)와 3기(2008~2017년)를 비교하면 유의미한 연구 관심 영역이 나온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의 경우 2기에는 진상과 관련한 연구물이 13편이었으나, 3기로 넘어오면 5편으로 3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4·3 문화 연구는 2기 7편에서 3기 들어 17편으로 243%나 늘어났다. 4·3의 기억과 트라우마 연구도 2기의 5편에 견줘 3기에는 9편으로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학위논문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2기의 4·3 진상과 관련한 연구 주제가 2기의 13편에서 7편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4·3 문학 및 문화예술과 관련한 연구 주제는 4편에서 13편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4·3 기억과 트라우마 연구도 2기의 3편에서 3기 6편으로 배가 늘었다. 이처럼 2기의 진상규명에서 문학작품 연구와 기억 트라우마 연구로 4·3의 연구 영역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주제 영역별 분류(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후보지 이상)

시기	연도/주제	1	2	3	4	5	6	7	8	9	합계
1기 1988 ~ 1997	1993						1				1
	1995	1									1
2기 1998 ~ 2007	1998	3					1				4
	2000	1									1
	2001		1			1					2
	2002			1							1
	2003			2	2					1	5
	2004	3	2	1			1			2	9
	2005						3				3
	2006	2	2			1					5
2007	4						2			6	
3기 2008 ~ 2017	2008	1		1	1			1			4
	2009	1		1							2
	2010					1	1			1	3
	2011	1	1						4		6
	2012	1	1				1		2	2	7
	2013		2				1				3
	2014		1		1					1	3
	2015	1	1				8				10
	2016			2	1		2				5
2017		3				4			1	8	
	합계	19	14	8	5	3	25	1	6	8	89

1. 4·3 진상 2. 4·3 기억 및 트라우마 3. 4·3과 법적 문제 4. 4·3의 의미 및 성격 규정 5. 4·3 영향 6. 4·3 문학 및 문화예술 7. 4·3 교육 8. 4·3 관광(다크투어) 9. 기타

셋째, 제주4·3연구소의 『4·3과 역사』(통권 17호)에는 모두 79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를 분류하면 제주 4·3 진상과 관련한 연구물이 21편으로 가장 많고, 4·3 기억과 트라우마가 17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4·3의 의미와 성격규정은 7편, 4·3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5편의 글이 실렸다. 4·3 진상과 관련한 글은 2기 8편에서 3기 13편으로 늘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위원회 관련 연구, 과거사 청산, 평화 운동, 일제 강점기 연구 등 기타로 분류된 글은 24편이다

『4·3과 역사』는 2001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함에 따라 2기에 해당한다. 2기에는 제주4·3의 발발원인과 미군정 자료의 소재, 무장대의 조직, 일본에서 발군된 4·3 자료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4·3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교육문제, 무장봉기 발발 원인 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3기 초반인 2008년부터는 4·3의 진상에 더욱 다가서는 글들이 발표됐다. 제주도 인민위원회, 서북청년단, 토벌작전 논리, 일본 지역에서의 4·3 운동과 경험, 평화협상 등의 연구가 있었고, 후반에는 4·3 트라우마와 함께 여전히 4·3의 발발원인과 냉전기 4·3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제주4·3연구소의 『4·3과 역사』에 게재된 논문 분석

	연도/주제	1	2	3	4	5	6	7	8	9	합계
2기 1998 ~ 2007	2001(1호)	2		1						3	6
	2002(2호)	1		2						3	6
	2003(3호)		3							4	7
	2004(4호)	1			1					2	4
	2005(5호)	2	1		2						5
	2006(6호)		1	1						3	5
	2007(7호)	2						2		2	6
3기 2008 ~ 2017	2008(8호)	4	1						1	1	7
	2010(9,10호)		1			1				1	3
	2011(11호)	1	5		1					2	9
	2013(12,13호)	1	3		1		1				6
	2015(14,15호)	2			1					1	4
	2016(16호)	1	2	1							4
	2017(17호)	4			1					2	7
	합계	21	17	5	7	1	1	2	1	24	79

1. 4·3 진상 2. 4·3 기억 및 트라우마 3. 4·3과 법적 문제 4. 4·3의 의미 및 성격 규정 5. 4·3 영향 6. 4·3 문학 및 문화예술 7. 4·3 교육 8. 4·3 관광(다크투어) 9. 기타

3.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제주4·3 연구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제주도민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룩한 성취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제주4·3의 참혹한 피해자인 제주도민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고 있다. 여기서 이 글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4·3 연구가 갖는 성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3 연구는 학술연구를 통해 40여년 이상 금기시돼 온 4·3 진실의 문을 부단히 두드려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3 연구 과정 자체가 4·3진상규명운동이며, 명예회복운동이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위한 운동이다. 4·3 수형인들을 4·3희생자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4·3 수형인과 관련한 구술채록집을 만들고, 학술대회를 열어 수형인 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4·3희생자에 4·3 수형인들

을 포함시키는데 기여했다. 4·3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과거사 문제,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제주지역의 연구 지평을 확산했다.

둘째, 4·3연구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영역의 확장이 일어났다. 초기 4·3 연구는 4·3을 ‘폭동’ ‘반란’으로 규정한 국가권력에 맞서 그것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왜곡됐던 사건의 진상을 온전한 진실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4·3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의 위치 짓기와 이를 넘어선 냉전과 세계사 속에서의 위치 찾기를 시도하는 과정을 밟았다. 또한 구술채록을 통한 4·3 경험자들의 생애를 끄집어냄으로써 4·3의 기억과 트라우마 연구로 확산됐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4·3을 해석하는 시도도 4·3 연구의 진전이었다.

셋째, 4·3 연구는 지역 간·국가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했다. 이는 주로 제주4·3연구소를 통해 이뤄져왔다. 제주4·3 50주년이었던 1998년의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심포지엄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만은 물론 중국, 일본 등지의 연구자와 교류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지역별 사례 비교연구로 발전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색하기도 했으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 활동으로 진전됐다. 이는 4·3 연구를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경계 안에 묶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적,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인류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을 고찰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4·3연구는 이러한 성과에도 여전히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4·3 진상 연구는 2기에서 3기로 접어들며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4·3 진상이 온전히 드러나 더는 연구의 필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일까? 그런 의미에서 4·3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구 인력이 한계가 있다. 4·3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자 층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4·3의 진상 자체를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연구자가 다수 만들어져야 한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대학에 4·3 연구자가 없다는 것은 4·3 연구 30년의 현주소를 웅변하는 것이다. 4·3 전문 연구자가 만들어질 공간이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체계적인 4·3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 인력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30년 4·3연구의 중심은 제주4·3연구소였다. 필요한 주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시기마다 연구 주제를 정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다.

4·3 연구 30년을 맞은 지금, 진실규명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러한 교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4·3 연구의 관점이 4·3 진상 규명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4·3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4·3의 진실이다. 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시각으로 4·3을 조망해야 한다. 4·3 사건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다루지 않은 영역이 꽤 있다. 예를 들면, 해방 전후의 제주도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 3.1사건에서 4·3 무장봉기에 이르는 과정의 제주도 유력자들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제주도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청년단체 경찰과 제주도민과의 관계 등 대한 촘촘한 실제 분석, 김익렬-김달삼간 평화협상의 실제,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영향, 5·10선거, 미국과 4·3의 관계, 초토화 시기 만행을 저지른 경찰 군 우익청년단체의 명부, 마을별 4·3 실태, 물적 피해, 연좌제 등이 있으며,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더라도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4·3 관련 자료의 발굴이다. 4·3 연구는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끝으로, 공공기관의 4·3 자료 발굴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4·3위원회는 국내외의 많은 공문서를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증언 축적에 비해 새로운 기록의 발굴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제주신보』와 주한미군사령부·미국무성 관련 문서 이외에는 별다른 기록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다.

4·3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곳도, 자료가 남아있는 곳도 미국이다. 미국 자료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내셔널아카이브즈에 대한 사료 조사는 2001년 단 한차례 조사한 것 밖에 없다. 그동안 많은 미국 자료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복사돼 국내의 여러 기관에 들어왔으나,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문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일본 국회도서관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4·3관련 자료들이 있다.

셋째, 국내 자료에 대한 조사와 수집도 이뤄져야 한다. 유학자 김경종이 이승만에게 4·3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과 한국전쟁 당시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승만의 학살 책임을 꾸짖는 '이승만 성토문'을 발굴한 것처럼 4·3 당시 토벌작전에 나섰던 군·경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료수집과 민간부문의 사료수집도 중요하다. 정부기관의 문서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경 출신들을 직접 찾아 그들이 갖고 있는 사료들을 탐색해야 한다.

넷째, 4·3 경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구술채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4·3 관련 사료는 많은 발굴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은 구술채록을 통한 역사의 꿩맞추기가 될 것이다. 이미 4·3체험세대의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억 또한 사라지고 있다.

다섯째, 기존의 자료들과 앞으로 발굴되는 자료들을 한 데 모은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